

충남리포트 제126호

# ChungNam Report

2014. 09. 16.

## CONTENTS

### 〈요약〉

1. 지방정부의 새로운 역할
2. 신지역주의와 분권형 지역발전의 주체론
3. 현행 시·도의 권한과 기능
4. 초광역 자치체제 모색
5. 충청남도 광역자치의 전략과 과제
6. 결론 및 제안

## 분권형 초광역자치의 필요성과 과제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sekim0313@snu.ac.kr](mailto:sekim0313@snu.ac.kr)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초광역 자치체제의 형성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함

### 요약

- 광역시와 도의 분리는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과 경쟁, 중복 가능성을 높여 종합행정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 또한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산하기관의 기능 중복으로 행정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임
-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으로 충청남도·대전광역시·충청북도의 광역연합 형성,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통합, 대전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세종특별자치시의 초광역체제 형성 순서로 단계적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함.
- 특히 가능하다면 장기적으로 충청남도·대전광역시·충청북도·세종특별자치시를 통합하는 분권형 연방제를 형성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으로써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봄
- 이를 추진하기 위해 우선 먼저 충청남도가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하고, 헌법 및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조례입법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중앙정부는 합법성 여부만 감독하여 충청남도 사무운영에 자율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함. 또한 지방공무원은 역량강화와 책임의식을 고취시켜야 하며, 주민참여를 활성화해야 함



## 지방정부의 새로운 역할 ◀

# 01

### ● 현행 국가주의에 기초한 중앙집권형 지역발전 방식은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함

- 국가주도의 지역개발 정책은 수도권에 성장을 가져왔으며 수도권에 인구·산업·경제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로 인해 고용기회가 많아진 수도권 지역에 우수한 인력이 몰려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수도권의 과밀과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역기능을 초래함
- 우수한 인재와 자본, 투자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지역은 발전 동력 부족으로 쇠퇴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지역 간 격차발생은 갈등을 심화시켜 국가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함. 또한 국가는 발전을 위한 ‘효율성’의 가치만을 강조하여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 자생능력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함

### ● 새로운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짐

- 세계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새로운 역할정립이 필요하게 됨. 세계화 시대의 중앙정부는 국제관계, 핵문제, 남북관계 등 외교·국방 문제를 다루는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산업경제, 사회문화와 같은 기능은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변화함
- 저출산·고령화 현상, 지방분권화, 가치의 다원화, 주민참여의 활성화 등 지방행정의 환경 변화로 인해 지역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됨

- 우리나라는 각 지역마다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주민들은 정부에 대해 상이한 행정수요를 가지고 있고, 각 지역은 인구·면적·재정 및 재정자립도·지역 내 총생산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은 지역의 차별성 및 다양성은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기반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할 당위성을 제공해 줌
  
-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지역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현행 지방분권의 문제점 및 외국사례 분석을 통해 신지역주의에 기반한 초광역 자치체제의 형성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함

# 신지역주의와 분권형 지역발전의 주체론

## 02

### 1) 신지역주의의 개념과 의의

-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는 지역문제를 새로운 지방정부의 형성 혹은 기존의 정부 간 협력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이나 이론을 의미함(Swanstorm, 1996, 2001; 배응환, 2010 재인용). 이는 지역(region)을 경제 및 사회발전의 기본단위로 보아 지역 자체의 역량을 통한 발전을 강조하고, 효율성뿐만 아니라 자립과 균형의 가치도 함께 추구하고자 함(정원식, 2009)

### 2) 분권형 지역발전의 주체 : 외국의 지역정부 사례

- 정치적 분권(Political Devolution)발전은 지방분권화(Decentralization), 지역정부화(Regionalization), 연방화(Federalization) 순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점차 지역 간 분절이 아닌 통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함(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

- 독일의 지역정부<sup>1)</sup>

- 연방국가인 독일은 서로 다른 역사적 전통과 문화, 정치적 성향을 가진 지역을 기초로 하여 주정부를 수립하였고, 지역정부를 통해 지역정체성이 확대되었음. 독일은 우리나라

1) 한국지방정책연구소(2009);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0); (2012)

라 광역자치단체와 비슷한 규모인 주정부에 대해 자치권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및 민주성 강화, 지역균형발전, 연방제 강화를 목적으로 지방행정구역을 개편하였고, 주정부에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부여함

● 스페인의 지역정부<sup>2)</sup>

- 스페인은 강력한 중앙집권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역정부가 대두되었음. 지역정부는 지역 독립운동을 수용하는 획기적인 정치적 분권에 기초해 등장했고, 지역 간 정치적·문화적·민족적 차이로 인한 독자성을 존중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정부에 폭넓은 자치권한을 부여하여 각 지역정부는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를 구현하고 있음

● 영국의 지역정부<sup>3)</sup>

- 영국의 행정체제 개편은 상이한 문화와 전통을 지닌 지역정부 중심의 발전전략과 잉글랜드 내의 광역정부 추진으로 나눌 수 있음. 영국은 1998년 정치적 분권정책으로 스코틀랜드, 웨일즈에 각각 지역정부를 창설하여 중앙정부의 통제를 완화하고 광역행정수요에 부응하고자 하였으며, 잉글랜드는 새로운 자치단체(Unitary Authority)를 출범시켜 광역사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

● 프랑스의 지역정부<sup>4)</sup>

- 중앙집권적 행정체제 전통을 가진 프랑스는 유럽연합(EU)의 등장과 유럽연합의 분권정책에 부응해 광역권 형성정책을 시행함. 중앙집권체제가 경제·사회발전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레지옹 중심의 광역권을 설치·운영하였고, 장기적으로 '지역정부화'를 추진하고 있음

---

2) 한국지방정책연구소(2009)

3) 한국지방정책연구소(2009);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0); (2012)

4) 한국지방정책연구소(2009);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0); (2012)

● 일본의 지역정부<sup>5)</sup>

- 일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분담, 국가역할의 재정립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함. 국가의 역할은 국가존립과 관계된 사무, 전국적 규모의 시책 및 사업, 전국적 준칙사무로 역할을 제한함
- 일본의 도주제는 도·도·부·현의 행정구역과 경제권의 불일치 문제 해결, 지방재정위기 대응, 지방분권개혁의 대응, 지역의 능력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여 47개의 도·도·부·현을 9~13개의 광역적 협력체제로 구축하고자 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의 전략으로서, 도주제는 법적으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의 권한을 가짐
- 간사이(關西) 광역연합은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 지역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광역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행정기구임. 이는 부·현 위에 초광역체제를 수립하는 도주제 출현 이전의 실현가능한 광역체제로 볼 수 있음

---

5) 한국지방정책연구소(2009);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2); 이정석(2011); 정재희 외(2012)

# 03

## ▶ 현행 시·도의 권한과 기능

- 우리나라 사무배분 현황은 전체 42,947개의 사무 중(2011년 기준) 국가사무는 29,675개(69.1%), 광역자치단체사무는 7,013개(16.3%), 기초자치단체사무는 6,188개(14.4%)임. 국가사무는 전체사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시·도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미약함(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
  
-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행정기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전문분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음(박응격, 1998). 그런데 현실적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지방자치단체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시·도의 기능을 상당부분 제약하고 있음
  
- 2012년 기준 시·도의 재정현황은 예산규모의 경우 도는 519,236억 원, 광역시는 294,793억 원임. 도를 기준으로 한 재정규모의 경우 최소는 충청북도(58,798억 원), 최대는 경기도(284,761억 원)로서 약 4.8배의 격차가 발생함. 평균재정자립도는 도의 경우 34.8%, 특별·광역시의 경우 69.1%로서 전국평균 52.3%와 비교하여 도는 전국평균보다 낮고, 특별·광역시는 전국평균보다 높음(안전행정통계연보, 2013)
  
- 지역발전을 위한 도의 한계는 다음과 같음
  -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도는 조선시대에 8도로 정착되어 19세기 말까지 유지되면서 중요한 지방행정체제로 정착되었으나, 일제강점기에 8개의 도가 13개로 분할되어 도의



행정구역이 축소되었음. 또한 특별시, 직할시, 광역시 제도의 도입 및 광역시의 2층제로의 전환은 도의 행정구역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하여 왔으나, 보완성의 원칙, 기초지자체 우선의 원칙으로 시·군·구의 기능강화가 적극적으로 논의돼 도의 지위와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함
- 2013년 서울대학교 서베이센터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광역지자체보다는 기초지자체를 더욱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남

# 04

## ▶ 초광역 자치체제 모색

● 우리나라 초광역 자치체제의 모형은 다음의 두 가지로 고려해 볼 수 있음

- 첫째, 연방제의 모형은 우리나라에서 향후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행정체제로 적합함. 연방제는 헌법적 권력분립 규정, 지역정부에 대한 정치행정권한의 강화, 재정권 보호제도와 재정조정제도, 지역정부의 국정 참여 및 국제조약 참여를 그 특징으로 함
- 둘째, 단방제의 모형은 영국의 모형과 일본의 도주제를 참고할 수 있으며, 지역정부의 정치적 분권, 중앙-지역정부의 관계에서 지역정부에 보다 많은 권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함

● 우리나라 초광역 자치체제의 대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광역연합**. 이는 특정한 광역적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를 유지하며 기능적 통합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자치단체들의 정치·행정적 권한이 변화하지 않아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음. ① 서울·인천·경기, ② 강원도, ③ 충청남도·충청북도, ④ 전라남도·전라북도, ⑤ 부산·울산·경상남도·경상북도 간에 형성될 수 있음
- 둘째, **광역시와 도의 통합**. 유사한 지역적 특성과 역사를 가진 공간을 인위적으로 광역시와 도로 구분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임.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6개 광역시를 기초자치단체로 전환하여 소속 도의 관할로 환원하여 1특별시 9시·도 체제를 형성함
- 셋째, **초광역 지자체**. 초광역 지자체는 도자치단체의 상급 지방자치단체로서, 기존의 도자치단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재의 2~3개 도를 통합하여 초광역 지자체를 형성함. 초광역 지자체1(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시), 초광역 지자체2(강원도), 초광역 지

자체3(대전, 세종, 충남, 충북), 초광역 지자체4(광주, 전남, 전북), 초광역 지자체5(대구, 부산, 울산, 경북, 경남)를 제안할 수 있음. 초광역 지자체는 광역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함

- 광역자치단체의 규모 확대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업무는 기초자치단체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로 향후 시·군의 장래를 결정해야 함

## 1) 광역자치단체로서 충청남도의 약점

### ● 충청남도의 인구와 규모

- 2013년도 3월 기준으로 충청남도의 인구는 203만 명으로서(외국인 제외), 이는 자족적·내생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어려운 규모임.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로 분리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충청권의 경제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발생함

### ● ‘도너츠 형태’를 가진 충청남도

- 역사적·문화적으로 유사한 두 지역을 광역시와 도로 구분함으로써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충청남도과 대전광역시의 분할은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과 갈등, 중복을 낳을 가능성을 높여 종합행정 구현을 어렵게 함. 또한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산하기관이 중복적으로 설치되어 유사한 광역행정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행정의 비용이 낭비되고 있음
- 인구·면적·재정의 분할은 행정서비스 공급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들며, 두 지역의 행정기관 통합을 통해 시설 공동사용 등과 같은 중복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도심기능과 농촌기능(배후기능)의 인위적인 분리하는 기형적인 공간구조를 형성해 도-농 통합 종합계획 및 협업체계 형성을 어렵게 함 (전병유, 2013)

## 2) 충청남도 광역행정체제의 대안

### ● 충청남도·대전 나아가 충청북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초광역자치체제의 형성

- 첫 번째 단계는 광역연합의 형성임. 충청남도·대전광역시·충청북도·세종특별자치시가 기존의 지방자치단체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광역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연합을 형성하는 방안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연합형성이 쉽다는 장점이 있음
- 두 번째 단계는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통합임. 수도권에 의존하지 않는 내생적 발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및 충청권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세 번째 단계는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통합과 더불어 충청북도와 세종특별자치시도 포함되는 초광역 지자체의 형성임. 이는 충청권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고,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이양함

- 지방행정의 종합성과 책임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특별행정기관의 사무를 도에 이양하여 주민에게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특히 국토관리 및 에너지·수자원 관리 기능을 하는 특별행정기관의 사무는 지역 특성과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도에 사무를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 3) 초광역 자치체제의 장점

### ● 초광역 자치체제의 수립은 무엇보다도 지역의 행정·재정능력의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음. 통합된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원과 기술 등의 공유를 통해 행정능력이 제고되며, 재정 측면에서도 통합에 따른 재정 증가와 중앙정부의 지원이 증가하게 됨

### ● 지역의 종합발전 계획 수립이 용이해짐. 인위적인 도심기능과 농촌기능의 분리에서 벗어나 도·농 통합체제를 형성할 수 있게 되고, 종합적인 발전계획의 수립이 가능해짐

- 독립된 노동 및 경제시장을 형성할 수 있음. 충청남도과 대전광역시 통합은 인구와 규모를 확대시켜 독립된 노동·경제시장의 형성이 가능해짐. 이는 지역의 고유한 독립적·내생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됨

## 4) 초광역 자치의 실행전략

### ● 자치역량 강화전략

- 첫째, 지방분권전략으로서 충청남도가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충청남도에게 권한을 이양하고, 자치사무에 필요한 조례의 입법 범위를 확대하며, 중앙정부의 지휘·감독 기능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로서, 지방공무원의 연수·교육 강화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지방공무원이 초광역 자치에 걸맞은 역량과 가치관을 갖도록 하며, 지방공무원의 책임의식이 향상되어야 함

### ● ‘국정이슈화’ 전략

- 충청권 이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관계를 형성해 초광역 자치체제의 개편을 국정이슈화 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함. 국정이슈화를 위한 방안으로 세미나 개최, 국정건의 등이 있으며, 국민이 초광역 자치체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필요함

## 5) 분권형 헌법의 제정과 그 방향

### ● 지방자치의 가치 및 지방분권국가의 표명

- 헌법에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분권형 헌법을 통해 수직적 권력분립을 확립하고, 지방자치의 이념과 주민주권의 원칙이 헌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함

## ● 자치권의 보장

-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이 ‘법률의 범위 안’에서 보장되도록 하고(김상태, 2013: 289; 신원득, 2009: 81; 김수연, 2010: 330), 제한된 범위 내에서 형벌 부과, 재산권 제한이 가능하도록 입법권의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 및 과세권을 제정·집행할 수 있도록 재정고권을 인정해야 함
- 헌법은 주민주권 규정을 명시하고, 주민의 직접참정제도를 보장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안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김순은, 2008: 55)


## ● 보충성·자기책임원칙

- 헌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기준을 명시하여 합리적인 사무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헌법에 국가사무를 열거하고 이외의 사무는 지방사무에 속하도록 하는 보충성·자기책임원칙을 규정해야 함. 또한 국회에 양원제를 도입해 정책결정과정에서 지역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함(김순은, 2008: 55; 김수연, 2010: 323)

● 중앙집권형 지역발전 및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한계

- 중앙정부의 압축 성장 전략으로 인해 수도권 집중현상이 발생하였고, 상대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비수도권 지역과의 격차가 커지게 되면서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하였음
- 지역 간·국가 간 경쟁이 중요해진 세계화 시대가 도래하고, 저출산·고령화 현상, 지방분권화, 가치의 다원화, 주민참여의 활성화 등 지방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는 적합하지 않으며, 이러한 부작용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위와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큼

● 21세기 신지역발전의 모색

-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지역주의 접근법은 대도시 광역권을 확대하는 세계적인 추세와 부합함. 신지역발전의 방안으로는 광역연합의 형성, 기존의 광역시와 도의 통합, 도 간 통합을 통한 초광역 지자체의 형성을 제안할 수 있음
- 충청남도는 신지역주의의 접근법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대안은 충청남도·대전광역시·충청북도의 광역연합을 형성하는 것, 두 번째 대안은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를 통합하는 것, 세 번째 대안은 충청남도·대전광역시·충청북도·세종특별자치시의 초광역 지자체를 설립하는 것임
- 장기적으로는 광역연합의 형성, 광역시와 도의 통합, 초광역 지자체의 형성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하며, 권한도 이에 비례하여 점차 강화되어야 함. 가능하면 충청남도·대전광역시·충청북도·세종특별자치시를 통합하는 분권형 연방제를 형성하는 것이 최선임
- 이를 위해 충청남도는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초광역 자치체제 개편이 국정이슈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함. 



※ 본 연구는 '21세기 신지역발전을 위한 분권형 거버넌스의 구축방향'(2013) 과제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으며, 충남발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 참 고 자 료 ◆

- 김상태. (2013). 지방분권의 헌법적 보장. 법학연구, 49, 277-296.
- 김수연. (2010). 지방자치제의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헌법학연구, 16(2), 299-337.
- 김순은. (2008). 정치·행정권한의 차등분권과 헌법개정: 정치·행정권한의 비대칭적 분권. 한국 지방자치학회 토론회 발표자료.
- 박응격. (1998).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구조·기능 재조정. 한독사회과학논총, 8, 113-141.
- 배응환. (2010). 신지역주의와 협력거버넌스: 광역경제권 설계의 전제. 한국행정학보, 44(4), 203-232.
- 신원득·조성호·이현우. (2010). 지방분권형 헌법(안) 연구. 정책연구, 2010(6), 1-113.
- 이정석·경남발전연구원. (2011). 일본 간사이권(關西圏) 현안 연계 동향. 창원: 경남발전연구원.
- 안전행정부. (2013). 안전행정통계연보.
- 전병유. (2013). 초광역체제의 필요성과 충청광역체제의 당위성. '21세기 신지역발전을 위한 분권형 거버넌스의 구축방향'에 대한 자문의견.
- 정원식. (2009). 신지역주의 관점에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의 비교분석. 한국 정책과학학회보, 13(3), 23-53.
- 정재희 외. (2012). 영남권 경제공동체 실현, '간사이 광역연합(關西廣域聯合)'은 어떻게 했나? 경남 발전연구원.
- 한국지방정책연구소. (2009). 시·도의 법적 위상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a).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b). 선진 지방자치제도 : 독일. 선진 지방자치제도, 5, 1-247.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c). 선진 지방자치제도 : 영국. 선진 지방자치제도, 3, 1-259.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d). 선진 지방자치제도 : 일본. 선진 지방자치제도, 2, 1-393.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e). 선진 지방자치제도 : 프랑스. 선진 지방자치제도, 4, 1-290.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0). (지방행정체제 개편) 선진 사례에서 길을 찾다. 서울: 매일경제신문.

## 2014년도 충남리포트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4-01	동아시아 철새 보전, 서천갯벌에 달렸다	정옥식	2014.01.01
2014-02	통합브랜드 구축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인다	이충훈	2014.01.09
2014-03	충남의 협동조합, 정체성을 높이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송두범	2014.01.21
2014-04	이제! 유역주민이 참여하는 물자치 시대이다	이상진	2014.01.27
2014-05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되살리기, 상품권 사용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민정	2014.01.28
2014-06	조류인플루엔자(AI) 관리 대책, 예방이 최우선이다!	정옥식	2014.02.11
2014-07	지원·참여형 문화소외계층 정책으로 충남형 문화복지시책을 추진하자	이인배	2014.02.13
2014-08	FTA를 수출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김양중	2014.02.20
2014-09	사라지는 농촌마을! 한계(限界)마을정책 도입해야	조영재	2014.02.25
2014-10	2014년 충남경제 전망과 시사점	김양중	2014.02.28
2014-11	다기능농업을 활성화하자	이관률·정현희	2014.03.06
2014-12	충청남도 벤처기업 현황과 발전방안	임형빈	2014.03.13
2014-13	충남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김원철	2014.03.27
2014-14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최병학	2014.04.03
2014-15	충남의 행복지표와 정책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고승희	2014.04.16
2014-16	충남 논·밭의 생물상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정옥식	2014.05.08
2014-17	2040년 읍면동 인구 추계로 본 충남의 정책과제	임준홍·홍성호	2014.05.15
2014-18	내포광역도시권 형성을 위한 지역간 연계·협력 추진 방안	오명택·김정연	2014.06.12
2014-19	충남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자동차부품산업	김양중	2014.06.19
2014-20	민선6기 충남도 및 기초자치단체 당선자 공약 분석	송두범	2014.06.24
2014-21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수철	2014.07.14
2014-22	지역을 위한 농협 혁신 성공 전략	이호중	2014.07.16
2014-23	대등하고 협력적인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정립을 위한 제도개선	이정만·고승희	2014.07.17
2014-24	충남 보육정책 진단과 공공성 강화 방안	최은희	2014.07.21
2014-25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기술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김양중	2014.07.23
2014-26	충남 협동조합의 조직화와 공급생태계 조성의 필요성	장종익	2014.07.28
2014-27	충청남도 자기주도 행정체계의 지속적 관리방안	주운현	2014.07.30
2014-28	충남 정책 키워드(3농혁신, 사회적경제)의 SNS 데이터 분석	임화진	2014.07.31
2014-29	프란치스코 교황의 충남 방문 의미와 향후 과제	유병덕·최영화	2014.08.05
2014-30	충남 자동차부품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김양중	2014.08.07
2014-31	내포지역의 정체성 정립과 추진과제	박철희	2014.08.11
2014-32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 모색과 민선6기 충남의 발전 방향	김찬규 외	2014.08.21
2014-33	지방 3.0 시대, 충남 재정정보공개의 의미와 과제	정창수	2014.09.11

■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cdi.re.kr](http://www.cd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

■ 본 연구보고서는 충남발전연구원의 자체보고서로 발간된 것이며, 충남도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